

경제이슈 선점... 盧정권 실정 반사이익

■ 이명박 당선자 압승 요인

‘개혁에서 경제로’ 시대정신 중심 이동 범여권 갈등에 중산·서민층 등 돌리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압승한 원인은 참여정부와 여당의 실정과 경제라는 시대적 화두가 원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참여정부와 여당의 실정으로 양극화가 심화, 민생 경제가 붕괴되면서 보수층은 물론 여당의 지지기반이었던 중산·서민층까지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명박 후보 지지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또한, 셀러리맨에서 현대건설 사장이라는 입지전적 이력과 함께 서울 시장 시절의 청계천 복원 등이 겹치면서 ‘경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확고하게 각인된 점도 이명박 후보의 대선 압승 원인으로 꼽힌다.

이를 반영하듯, 이명박 후보는 경선은 물론 대선 과정에서 각종 의혹과 공세에 시달렸지만 ‘경제’라는 화두를 모토로 지지율 1위를 지키며 대선 압승을 일궈냈다.

여기에 두 차례 대선에 패한 뒤 대선 승리를 위해 전열을 정비하고 경제라는 시대적 화두를 부각시킨 한나

라당의 준비된 모습과 보수층과 수도권 표심 결집도 이명박 후보의 승리를 이끈 것으로 평가된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이번 대선 결과는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의 승리”라며 “한나라당은 더욱 겸허한 자세로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의 대선 참패 원인은 무엇보다도 IMF 이후 민생 경제 붕괴에 대한 민심의 이반으로 풀이된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등 민주·개혁정부 10년 동안 중산층이 붕괴되고 서민들의 생활이 나아지기보다는 오히려 악화했다는 점에서 여당의 지지기반이었던 바닥 민심이 등을 돌렸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정치권에서는 범여권에 등을 돌린 민심에 대해 ‘무능력한 민주정부에 대한 민심의 탄핵’이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범여권의 지지기반인 중산층과 서민층이 등을 돌리면서 이번 대선 실패는 예견된 바 있

다”며 “그러나, 범여권은 민심 이반의 심각성을 과부로 느끼지 못하고 정치공학적 사과에 머무르다 대패했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참여정부의 아전인수격인 국정운영과 대통합민주신당 등 범여권의 정치력 부재는 민심의 이반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즉, 중산층이 붕괴되고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참여정부와 여당은 민생을 챙기기보다는 비상사태인 갈등을 양산하는데 그쳤다는 것이다. 민생을 보듬는 당정 차원의 협력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대통합민주신당 선대위 관계자는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목표는 좋았지만 도덕적 우월성에만 빠져 국민과 함께 가는 방법을 도출하지 못했다”며 “대선 패배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자인했다.

또한, 정치적 리더십 부재의 분열을 거듭하며 국민에게 감동보다는 범여권에 대한 정치적 혐오감을 안겨줬다. 실제로 범여권은 대선 기간 내내 분열과 반목을 거듭했으며 지지층이

盧대통령·李당선자

조만간 회동키로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오전 중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게 축하전화를 할 예정이라고 청와대 청와대 대변인이 19일 밝혔다.

전 대변인은 “이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집계를 통해 당선자로 최종 확정된 후 대통령이 축하전화를 할 예정”이라며 “오늘 밤 당선자로 확정되면 청와대 정부팀이 당선자측과 협의해서 내일 오전 중 축하전화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20, 21일께 문재인 비서실장과 차성수 시민사회수석을 이 당선자에게 보내 축하인사를 전하고 축하한다고 전달할 예정이다.

문 실장은 축하 방문 자리에서 이 당선자에게 노 대통령의 청와대 초청 의사를 전달하고, 이 당선자측의 의견을 들어 노 대통령과 이 당선자의 회동 여부와 시기 및 방식 등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대변인은 “노 대통령과 이 당선자의 회동 문제는 당선자측의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될 것”이라며 “당선을 축하하는 회동”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아침 종로구 신교동 서울 농학교 강당에 마련된 청문회 제1투표소에서 투표를 한 후 특별한 일정 없이 청와대 관저에서 머물렀고, 대선 개표방송을 TV를 통해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19일 밤 제17대 대통령 선거 개표가 진행된 광주시 동구 장동 전남여고 대강당에서 개표종사원들이 한표 한표 신중하게 국민의 표심을 세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요구했던 감동의 대통령 드라마를 쓰는데 실패, 지지층의 이탈은 물론 부동층의 보수 진영 합류를 사실상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이를 반영하듯, 범여권 대선 후보

들의 지지율을 모두 합쳐도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지지율에 못 미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빚으며 대선 참패를 예고했다. 여기에 ‘노무현 효과’도 여당의 참패를 이끌었다는 지적이

다. 참여정부에서 통일부 장관 등을 지낸 정동영 후보에 ‘반(反) 노무현’ 국민 정서가 반영되면서, 경쟁력이 급감했다는 것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후보자별 득표수

(괄호안은 투표율 및 득표율 20일 0시 현재)

선거인수	투표수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한나라당 이명박	민주노동당 김영일	민중당 이인제	창조한국당 문국천	참주연합 정근호	경제공화당 허경명	새시대 참사원연합 전관	한국사회당 김민	무소속 이희창	
합계	37,653,518	22,626,506 (60.1)	5,939,846 (15.8)	10,911,311 (29.0)	677,016 (1.8)	154,899 (0.4)	1,301,022 (3.5)	14,480 (0.04)	91,817 (0.25)	6,795 (0.02)	17,086 (0.05)	3,398,320 (9.1)
서울시	8,052,696	4,505,991 (56.0)	1,104,371 (13.8)	2,392,544 (29.8)	103,567 (1.3)	20,424 (0.3)	318,235 (3.9)	2,544 (0.03)	19,773 (0.25)	767 (0.01)	2,968 (0.04)	528,478 (6.6)
부산시	2,843,063	1,760,415 (62.1)	236,084 (8.3)	1,015,892 (35.7)	48,770 (1.7)	4,589 (0.2)	94,027 (3.3)	768 (0.03)	7,333 (0.3)	406 (0.02)	1,196 (0.04)	345,385 (12.2)
대구시	1,896,866	1,251,287 (66.1)	74,569 (3.9)	866,768 (45.7)	25,373 (1.3)	1,775 (0.1)	49,741 (2.6)	355 (0.02)	3,308 (0.2)	210 (0.01)	680 (0.04)	224,349 (11.8)
인천시	2,005,874	1,054,829 (52.6)	247,378 (12.3)	519,202 (25.9)	36,341 (1.8)	6,579 (0.3)	73,592 (3.7)	682 (0.03)	5,073 (0.25)	280 (0.01)	906 (0.04)	166,604 (8.3)
광주시	1,031,333	663,338 (64.3)	527,588 (51.2)	56,875 (5.5)	13,597 (1.3)	7,118 (0.7)	31,524 (3.1)	398 (0.04)	1,547 (0.15)	96 (0.01)	289 (0.03)	22,520 (2.2)
대전시	1,098,977	680,264 (62.0)	159,700 (14.5)	246,008 (22.4)	17,207 (1.6)	7,223 (0.7)	48,143 (4.4)	467 (0.04)	2,356 (0.2)	204 (0.02)	683 (0.06)	195,957 (17.8)
울산시	806,423	509,308 (63.2)	68,897 (8.5)	274,110 (33.9)	43,071 (5.3)	1,744 (0.2)	27,832 (3.4)	251 (0.03)	2,032 (0.25)	100 (0.01)	434 (0.05)	88,397 (11.0)
경기	8,222,124	4,926,223 (59.9)	1,158,424 (14.1)	2,544,230 (31.0)	142,101 (1.7)	29,828 (0.4)	346,678 (4.2)	3,297 (0.04)	23,100 (0.3)	1,282 (0.02)	434 (0.01)	656,405 (8.0)
강원	1,164,655	28,895 (2.5)	136,668 (11.7)	376,004 (32.3)	28,129 (2.4)	6,085 (0.5)	42,552 (3.6)	615 (0.05)	5,963 (0.5)	436 (0.04)	849 (0.07)	127,102 (10.9)
충북	1,146,102	702,434 (61.4)	165,803 (14.5)	289,440 (25.2)	25,280 (2.2)	7,964 (0.7)	39,873 (3.4)	561 (0.05)	3,435 (0.3)	321 (0.03)	759 (0.07)	162,705 (14.2)
충남	1,532,751	924,009 (60.3)	192,989 (12.6)	313,699 (20.5)	32,132 (2.1)	22,692 (1.5)	43,381 (2.8)	934 (0.6)	3,813 (0.25)	568 (0.04)	1,131 (0.07)	30,246 (2.0)
전북	1,425,056	957,575 (67.2)	777,236 (54.6)	86,149 (6.0)	18,138 (1.3)	6,550 (0.5)	26,573 (1.9)	590 (0.04)	1,777 (0.13)	270 (0.02)	538 (0.04)	34,630 (2.4)
전남	1,500,831	965,282 (64.3)	752,422 (50.2)	88,368 (5.9)	23,046 (1.5)	22,845 (1.5)	31,166 (2.1)	924 (0.06)	2,165 (0.14)	511 (0.03)	738 (0.05)	34,589 (2.3)
경북	2,097,394	1,408,546 (67.2)	94,722 (4.5)	1,014,466 (48.4)	38,590 (1.8)	3,733 (0.2)	46,137 (2.2)	792 (0.04)	4,565 (0.22)	680 (0.03)	1,426 (0.07)	191,054 (9.3)
경남	2,416,351	1,342,542 (55.6)	163,158 (6.7)	733,689 (30.4)	71,002 (2.9)	4,293 (0.2)	62,751 (2.6)	1,174 (0.05)	5,255 (0.22)	534 (0.02)	1,061 (0.04)	285,506 (11.8)
제주	414,022	245,569 (59.3)	80,038 (19.3)	93,876 (22.7)	10,682 (2.6)	1,559 (0.4)	18,817 (4.5)	128 (0.03)	1,222 (0.3)	130 (0.03)	300 (0.07)	36,383 (8.8)

인수위원장 박희태·김형오 거론

■ 대통령직 인수위 구성은?

위원 대부분 외부충원될 듯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될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수위는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내년 2월24일까지 활동하면서 정부 부처와 청와대의 주요 현안 및 업무를 인수하게 받아 차기 정권이 공백없이 정권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막중한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이 당선자가 향후 5년간 국정을 이끌어갈 청사진을 짜는 중차대한 역할도 맡는다.

특히 인수위 멤버 중 상당수가 대통령 취임과 함께 청와대 또는 정부 주요 부처에 임명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이 당선자 진영 인재풀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우선 인수위위원장은 실무형 인사가 기용될 것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내 권력이 인수위와 총선팀으로 분산되는 상황에서 ‘실력자’ 보다는 실무를 담당할 인사가 적합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인수위원장은 무게감 있는 중진 의원이 맡을 가능성과, 외부 인사가 맡을 가능성이 반반이다.

현재 당내에서 자천타천으로 인수위원장에 거론되는 인물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김형오 안상수 이재우 홍준표 의원 정도. 경선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에 이어 선대위 상임고문으로 활동해 온 5선의 박희태 전 부의장의 경우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인수위 체제를 이끌어 갈 적임자로 꼽히고 있다.

선대위 일류국가비전위원장을 맡아 이 당선자의 공약 수립 작업을 진두지휘한 4선의 김형오 의원은 정책에 대한 식견이 높고, 원만한 인간관계와 합리적 일처리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3선의 이재우 의원은 경선 당시 이 당선자 진영의 실질적 좌장 역할을 했고, 이 당선자의 통치철학을 꿰뚫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 당선자가 정치권 인사가 아닌 학계 인사나 전문가 집단에서 인수위원장을 발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어윤대 전 고려대 총장과 박세일 서울대 교수, 윤여준 전 의원 등의 이름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인수위 실무위원회에는 현역 의원들은 상당부분 배제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인사들도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곽승준 고려대 교수와 김우상 연세대 교수,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 등 학계 출신과 이춘식 특보부단장, 이동관 공보특보, 신재민 메시지팀장, 김해수 비서실 부실장, 정태근 수행실장, 박영준 네트워킹팀장, 강승규 커뮤니케이션팀장 등 선대위 실무 그룹이 인수위에 대거 합류할 전망이다.

강만수 전 재정경제원 차관과 외곽 정책자문그룹인 국제전략연구원(GSI)과 바른정책연구원(BSI)의 유우익, 백용호 원장 등도 인수위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